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통과된 간호법에는 새로운 내용이 많지 않고, 간호사의 활동 영역에 '지역사회'가 새로 들어갔어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을 따른다.

윤석열이 간호법 공포를 거부한 이유는 민주당과 정국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쟁투의 맥락이 있다.

그뿐 아니라, 재정 긴축과 복지 삭감이라는 맥락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확대에 그 수요를 상당 부분 채우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전임 문재인 정부조차 그 비용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부 여당 사이의 이견은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생색을 크게 낼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간협과 간무협, 의협 등의 갈등은 지역사회 돌봄시장을 놓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이다. 정부가 노인 돌봄 확대의 필요성을 시장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가운데 갈등이 커졌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새로운 내용은 간호법에 거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많은 간호사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 등에서 간호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했는지 말로만 칭찬했을 뿐 정작 보상은 하나도 없었다. 간호법은 그런 간호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선언적 수준에서나마 인정할 결과로 여겨졌다.

윤석열 정부는 잘 조직된 간호사들이 간호법 시행 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싫을 것이다. 그로 인해 노인 돌봄에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하게 될까 봐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인 돌봄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의 대안으로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서민층 노인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정부는 2023년 노인 돌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노인 요양서비스는 공급기관의 99퍼센트가 민간업자이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질이 낮다. 제공되는 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의료·요양·돌봄을 더한층 시장화("서비스 산업화")하려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의 요양시장 진출을 돕고자 시설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에는 대부분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다. 인력 배치 기준도 수많은 예외가 인정돼, 간호사 없이 간호조

무사만 있는 요양시설이 60퍼센트가 넘는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도 열악하다.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와 돌봄 인력이 충분히 배치돼야 한다. 이것은 국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 맞선 정치적 투쟁이 크게 성장해 복지에 지출을 늘리도록 압박해야 한다.

공약 파기

공약을 파기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사과논커녕 간호사들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이는 간호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간호사들은 5월 1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이고, 5월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었다.

간협의 준법 투쟁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병원과 의사의 지시로 진행돼 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의사 부족 등으로 간호사들은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업무도 많이 해 왔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간호사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간호사들이 간호법뿐 아니라 자신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요구들도 적극적으로 내놓고 투쟁하기를 바란다.

<노동자 연대> 정규호를 구입하세요

한일 정상의 원폭 위령비 참배 위선, '박원순 사건' 다큐멘터리 <첫 변론> 논란, 시가 세계를 정복한다고?, 타이 총선 결과, 튀르키예 대선 1차 투표 결과, 외국인 기사도우미 추진 등등에 관한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김남국, 위선적인 코인 투기꾼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원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재직 기간에 코인을 수천 번 사고 팔며 재산 증식에 몰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비판처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부업 정도로 여기고 코인 업자처럼 사적 영리 활동에 매진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문제가 없는 투명한 거래라는 데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반발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변명한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스스로도 혜택을 입는 법안 제정에 나서기도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은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말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싹쓸이 돈벌이를 하고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하고 변명하는 모습이 여느 특권층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는 행태다. 이번 사건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아직 충분히 입증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 의원은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클레이페이’라는 ‘잡코인’에 투자했다. 김



의원이 발행 업체로부터 고급 정보를 획득했거나, 발행 업체와 연계해 코인 가격을 띄운 뒤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큰돈을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느냐”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이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김 의원의 반발처럼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쟁점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김 의원이 비판해 온 것처럼 김건희는 “주가 조작 에이스”라 할 만하고, 광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은 “실제로는 뇌물일 것”이다. 이 사건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사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들이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민층 투자자들이 수백만~수천만 원씩 잃은 코인 투기판에서 수십억 원을 굴리며 돈벌이에 힘쓰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 대처는 이재명 대표의 한계를 보여 준다.

민주당은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섰을 뿐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전격 탈당해 당의 조사를 무력화했는데도 탈당을 막지 않았다. 이런 대응은 ‘침묵계인 김남국 의원을 보호하려는 시도일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실망과 냉소의 부메랑이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올 것이고, 대중적 환멸을 이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부·여당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기성 양당이 방치해 온 코인 투기 광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이 거대한 투기판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 줬다.

지난해 전 세계를 뒤흔든 루나·테라 폭락 사태, 거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납치·살해 사건 등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 조종과 다단계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이 들끓고 있음을 보여 줬다.

물론 정부와 몇몇 지배자들은 이런 투기 광풍을 우려의 눈으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2017년에 코인 광풍이 불었을 때 정부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정부가 시행한 규제책은 뚜렷한 게 없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가릴 것 없이, 규제를 완화해 ‘코인 투자 시장’이라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런 규제 공백을 비집고 김남국 같은 큰손들이 한몫 잡으려 투기판에 뛰어들어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다. 서민 생활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금융 규제 완화에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불안정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대중의 삶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이윤 경쟁 시스템 자체를 반대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온라인 토론회

마르크스주의와 평화주의

5월 24일(수) 오후 8시
발제 김인식 (노동자연대) 발행인

참가신청 bit.ly/0524-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